

KDF

민주주의 리포트

Issue & Review on Democracy

2022년 3월

제70호

민주화 35년, 민주화운동기념·계승 정책과 방향

: 한국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
성과의 세대 간 전승과 세계적 공유

이 영 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발행일 2022년 3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문의처 edit@kdemo.or.kr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민주화 35년, 민주화운동기념·계승 정책과 방향

: 한국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 성과의 세대 간 전승과 세계적 공유

이 영 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시민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6월 민주항쟁 35주년을 맞는 올해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 성과를 세대 간 전승하고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의 정립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편협과 왜곡을 방지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공통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를 세계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역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민주주의 공공외교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성취 과정에는 국민의 참여와 희생, 헌신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지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 공공외교의 추진은 세계가 함께 만들어온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과 가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는 세계 민주주의사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1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현재적 의미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전 선거와 달리 주요 공약은 물론 지역 공약에서도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과 각종 의혹의 부상에 따른 네거티브적인 선거 분위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화운동이 인정받고, 그에 따른 기념사업이 활성화된 것도 영향을 주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6·10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주요 민주항쟁에 대한 국가 기념일화가 진행되었고,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역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 크게 바뀌는 경향이 있다. 주요 국가기념일에 대한 대통령 참석 여부 등은 역사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태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제 국민적 수준에서 독립, 호국, 민주라는 소위 보훈의 3대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국민통합은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와 가치의 크기에 비례할

것이다. 이 점에서 독립, 호국, 민주라는 ‘공통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존중과 미래지향적 계승은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다.

독립, 호국, 민주는 민주공화국 수립과 발전 과정에서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는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 역사에 대한 정립과 가치에 대한 조화로운 기념·계승은 헌법적 정통성의 확립은 물론 국민통합과 민주공화국으로서 발전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한국 사회의 전환기이자, 6월 민주항쟁 35주년을 맞는 요즘,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 성과를 세대 간 전승하고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의 정립이다. 민주화운동이 특수한 세력과 집단, 지역, 세대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공통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를 세계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역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민주주의 공공외교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성취 과정에는 국민의 참여와 희생, 헌신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지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공공외교는 세계가 함께 만들어온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과 가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는 세계 민주주의사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2 민주화운동 역사화와 왜곡·편협 방지

민주화운동을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 내지 ‘반정부 투쟁’으로 국한해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폭넓게 이해되고 있다. 주요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기념일화나 전국 각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기념시설 건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민주화운동은 사적인 경험과 기억을 넘어 공적 차원에서 ‘역사화’ 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 정립 과정에서 정 반대 방향에 있는 두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하나는 구래의 민주화 당시 균열의 기계적·반복적 동원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편협이다.

우선 민주화운동 당시의 정치·사회적 갈등 구도와 해결방식에 대한 반복적 ‘동원’은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역사적 정립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소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독재와

민주'라는 구래의 대립 구도에 대한 지속적 동원이 그것이다. 민주화운동 당시의 균열과 갈등 구도에 대한 기계적 재현을 포함한 동원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시대,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역사적 정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거나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른 가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화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무엇보다 민주화운동 당시의 균열에 기초한 동원의 반복은 민주화운동에 기반한(다고 자임하는) 정치세력과 세대, 인물에 대한 평가를 민주화운동이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세력 또는 인물에 대한 지금의 평가가 이미 진행되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혼재되면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6월 항쟁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진행된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확대·심화·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굴곡은 있었지만, 민주주의는 지속해서 발전했고 보편적 가치이자 체제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민주주의 조사(democracy index)가 보여주듯이 한국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포스트민주주의(post democracy) 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 사회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coping with) 또 다른 민주주의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역사화의 지체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립은 물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승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지속해서 연계되는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이나 반복적 동원이 아니라 시민적 실천과 덕성과 같은 오늘날의 가치와 실천으로 전승·발전되어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민주화운동을 특정 참여자와 정치세력의 역사로 치부하거나, 북한군 개입설같이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 지속해서 재생산하거나 희생자에 대해 조롱하고 모욕하는 '왜곡과 폄훼'는 민주화운동 역사와 민주 가치 정립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동원과 반대 방향의 동원으로 정치적으로 조장되기도 한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왜곡과 폄훼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공공연하고 극단적인 방식의 왜곡과 폄훼는 줄었지만,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축소하거나 과거화 하는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불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없는 화해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 정립을 위해서는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가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기록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3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과 민주 가치의 세대 간 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방향

민주화운동 역사 정립을 위해서는 이미 정치·사회적 준거로 자리 잡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시각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국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은 3·1운동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었다. 민주화운동은 단지 독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3·1운동부터 백여 년간 지속해서 진행된 민주공화국 수립과 발전을 위한 운동으로 민주주의 역사의 중추에 해당한다.

민주화운동은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지는 민주공화국 수립과 발전이라는 헌법적인 가치와 이상에 입각한 일련의 실천과 성취의 과정이었다.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헌신과 참여의 역사이다. 민주화운동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권자들의 자기 역사이자 의지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의 정당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미 4·19혁명 정신이 헌법전문에 반영되어 있고, 5·18 정신 등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전국에서 다수 국민이 참여한 6월항쟁을 계기로 한국에서 민주주의 이행이 시작되었고, 부마민주항쟁과 6·10민주항쟁 등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기념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역사 정립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다음으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공적 차원의 예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가 성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민주화운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이 지속되었던 것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는 매우 중요하다.

2021년 국가보훈처에서 진행한 일반 국민의 보훈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8%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으로 보훈의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하되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 관련 공적 예우와 정례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독립·호국의 사례와 같이 민주주의 관련 공헌과 헌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발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 진행된 민주화운동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에 따라 인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공헌보다는 희생 여부가 주요한 인정의 기준이었고, 당사자 신청주의에 근거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헌과 희생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보훈처 조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독립, 호국, 공무수행,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등 다른 대상과 다르게 민주화운동에 대해 국민은 경제적 보상보다 기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4%인데 반해 희생을 기념하는 문화 조성과 관련해서는 71.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민주화 과정에서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는 다른 대상과 달리 개별적인 보상보다는 기념사업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이다.

경제적 보상보다 기념사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의 특성에 기인한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헌과 희생이 있었지만 반복된 항쟁이 상징하듯이 다수의 시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자에는 다수 국민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민주화운동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서 드러나듯이 개별적인 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참여자의 태도와 국민의 인식 역시 존재한다.

민주화운동 관련 예우는 따라서 인물 중심의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념사업 활성화라는 집합적인 예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 성과를 세대 간 전승하고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공헌자, 희생자, 참여자에 대한 기록과 기념과 같이 명예를 부여하는 예우 방식에 중심을 두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치유, 공헌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 등을 병행해야 한다.

민주화운동 공헌자와 희생자에 대한 집합적 예우로서 기념사업이 가해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기록화 없이 주요 항쟁에 대한 기념이나 민주화운동의 항거에 대한 기념으로 국한되어 진행된다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는 민주화운동 유적지, 사료에 대한 보전과 관리는 물론 민주화를 억압한 세력에 대한 조사와 가해 사실의 기록, 국가폭력시설의 시민 공간화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주요 민주화운동 유적지와 시설이 도시개발 등으로 소실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억압 기록과 억압 장소가 지속해서 은폐, 변형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남아 있는 기록과 공간에 대한 보전 조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4 한국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경험의 세계적 공유: 민주주의 공공외교 활성화

한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세계의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성취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이제 한국은 그 위상에 맞게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독재를 경험한 국가 중 비민주적인 체제로 퇴행하지 않고 높은 민주주의 성취를 이루어낸 국가라는 것과 세계적 수준에서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성취는 희생을 감내한 민주화운동의 헌신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 이외에도 세계에서의 연대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소위 '호국'을 위한 세계적 지원의 경우 공식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시적이었던데 반해 민주에 대한 세계적 지원은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해외에서의 기여와 헌신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고, 제대로 조명되지 못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비해 기념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는 국내를 넘어선 세계적 이슈이기도 했다. 당시 세계의 선진국, 국제기구, NGO 등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인권 억압과 독재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거나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국 민주화에 대한 세계적 지원과 연대는 크게 국외 교포와 현지 시민사회에서 한국 민주화를 위해 진행한 현지에서의 민주화운동, 해외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한국에서 외국 인사들의 민주화운동 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해외에서의 한국 민주화에 대한 지원은 성명서 발표나 자국 정부에 대한 압력, 한국의 실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민주화운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러한 지원은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이 국제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것처럼, 한국에서 민주주의 공공외교의 활성화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세계로부터 받은 지원으로 성취한 민주주의 역량으로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국격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즉, 한국은 전통적인 개발원조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기여라는 책무를 지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로 발전했다.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발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선진국에 걸맞은 기여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무와 연대를 위해 민주주의 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상징하는 곳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다. 민주주의 센터를 민주인권기념관과 연계하여 설립·운영한다면

한국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곳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이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의 경험과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책무 차원에서 민주주의 센터에서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민주화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가해와 항거에 대한 아카이브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처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민주주의를 위해 교훈을 줄 수 있는 역사적 보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세계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한 것과 같이 다른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 '아세안 인권 기금법'이 발의되어 있다. 우선 '아세안 인권 기금법' 입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지원하되 향후 역량에 따라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공공외교의 추진과 역내 민주주의 지원 등을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명칭을 민주재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화 35년, 민주화운동기념·계승 정책과 방향

: 한국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 성과의 세대 간 전승과 세계적 공유

발행일 2022년 3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